

청와대 출신 참모진 60여명 내년 총선 출마설 무성

총선 앞두고 靑내각 개편설 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엔 50명, 실제론 60명 넘어”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 연관 해석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을 둘러싼 개편설이 증폭되고 있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설이 연이어 고개를 들고 있고, 후임 인사들의 하마평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YTN ‘뉴스엔이슈’에 출연해 청와대-내각 개편설 관련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 중에서도 추가로 (내년 총선에) 나올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공직사퇴 기간이 내년 1월 17일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년 1월 17일 전에는 추가로 나올 분들도 매듭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인물 관련) 보도는 ‘50명’ 정도 됐는데, 이미 청와대 근무했다가 나오신 분들, 또 조금 더 나오실 분들 합치면 조금 더 된다. 6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며 “국회는 대표성·비례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보장이 돼야 하지만 너무 편향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 안팎에서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이 뜬날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설이 고개를 들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만찬 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영선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총선 출마설과 연관 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청와대 참모진 출마설도 마찬가지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경기 부천 소사·서울 구로를 출마설, 강기정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의 광주 북구갑 출마설 등이 그렇다.

이른바 ‘가족 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추 의원은 법조계(관사) 출신에 당대표 이력은 물론, 검찰개혁 이해도가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났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란 점도 추천 의견에 힘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내각 개편설이 증폭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후

반기 국정동력을 가를 중대변수가 ‘인사개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특히 청와대-내각 중심으로 개편설이 나온다”며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직 인선이 추후 문재인 정권 국정기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탕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연말 교체설이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에 탕평 인사가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정계 전언이다. 실제 노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최재진과 만나 “탕평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이 총리 후임으로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진 의원이자 노련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 정평이 났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작은기업 규제 136건 내년까지 풀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소상공인 건의사항 발로 뛰어 풀어”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큰 덩어리 문제를 건의합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이번에 ‘작은기업’ 규제를 해결한 것은 소상공인, 노점상 등 소통의 통로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건의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발로 뛰어서 푼 규제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소통의 통로가 적어 외면받던 자영업자·소상공인·창업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 규제 136건이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다니는 결과다. 규제개선 과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부 해결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기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구에서 연 ‘중기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에서 직접 발굴한 것이다. 중기부와 중기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및 적극 행정으로 작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를 없앨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136건이 풀린다. 중기부는 이 중 관행적이고 관습적

으로 행하던 4대 분야 40건 규제를 주요 개선과제로 정했다. 대부분 시행령에 해당해 정부 부처 등에서 국무회의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로 꼽힌 4대 분야는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9건)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15건)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19건) ▲현장으로 맞춤형 해소(6건)다.

공유오피스 입주 스타트업의 사업자등록 애로사항은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의 대표사례다. 지금까지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서로 달라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허용한다. 아울러 생존과 성장 저해 규제로 꼽히던 흡소빙 정액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기업의 프라임 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도 축소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와 동일하게 80%까지 감면해주고, 공동판매장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준수세 성격을 가진 규제와 현장애로 등이 해소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왼쪽)와 김현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시확대 50% 이상)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대입 ‘정시확대’ 한목소리에 교육계 “지역단위 경쟁 심화” 우려

정부, 이달말 공정성강화 방안 발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확대(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내용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언한 기조에 따라 정시 비중을 확대에 나섰다. 교육계가 전망하는 정부의 정시 비중 상향 시기는 2022·2023학년도 대입이다. 현행법상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년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 비중은 40% 정도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석대성 기자 bigstar@

軍, 사망사고자 진상규명... 6명 ‘순직’ 결정

국방부 “선임병의 구타 등 ‘자살’ 원인”

국방부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돼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방부는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

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고 김00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소속 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단순 자살하 것으로 처리됐

지만,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입은 무릎부상, 가해자 피해자 격리하지 않은 지휘관 관리소홀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됐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철 기자 captinm@

경영난 회사 사퇴, 자진사직 아닌 ‘해고’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면 이를 자진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자발적 퇴사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A씨 등이 자

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해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손현경 기자 son89@